

※ 다음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지난 1월 17일자 '과학기술계 3개기관의 공동성명서' 전문입니다. <편집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의 동력은 대부분 견고한 과학과 기술 인프라(Infrastructure for Science and Technology)로부터 얻어진다.

우리 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한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하여 과학기술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었으며,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OECD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선진한국을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은 대폭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분산시키는 것은 미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분리하여 분산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500만 과학기술인들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 및 국회 협의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첫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융합화 추세에 있고, 특히 과학과 원천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할 때 과학과 원천기술 지원 체제를 각각 다른 부처로 분리 분산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둘째, 과학과 원천기술, 그리고 산업화 기술은 그 지원 체제가 서로 다르다. 과학과 원천기술은 상향식(bottom up)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산업화 기술은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과학과 원천기술, 공공복지 기술 및 거대과학기술 등은 현재와 같이 동일한 부처(현 과학기술부)에서 일관성있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 따라서, 부득이 인력양성기능과 과학기술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과학과 원천기술을 함께 수용하여 그 명칭을 '인재과학기술부'로 하고, 산업화 기술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과학기술은 긴 안목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핵융합, 우주항공 등 거대과학기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되어야 하므로 인재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및 전담부처의 분산 논의는 500만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008. 1. 1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